

# 폭염 대처사업비 추가 지원

### 전북도, 정부로부터 특교세 2억원 지원받아 막바지 피해 최소화 총력

전북도가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에서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6억 9000만원, 도·시군 재난관리기금 5억 4300만원, 시군 자체사업 3억9000만원 등 15억4200만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처해 왔다.

폭염대처 사업으로는 그늘막 204개소를 설치, 공공장소 열염비치 140지점, 매일 54대(누계 663대, 16,273km)

의 살수차를 투입하여 주요도로 살수작업 실시하고 있고 물탱크를 구입하여 마을 안길 등 골목길 살수를 시행하는 등 시군을 통한 폭염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세는 전라북도에서 양산쓰기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휴대용 파라솔 구입과, 시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살수차 운영기간 및 기간 확대, 횡단보도 등 열을 추가 비치 등에 사용하여 최대한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국무총리의 지

시에 따라, 전라북도 및 시군 발주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이 심한 낮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농어민 등도 낮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말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폭염이 막바지에 있지만 폭염특보가 완전히 해제 될 때까지 폭염대처에 빈틈에 없도록 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국내 최초 천도복숭아 '천홍'

신학기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최초 천도 품종인 '천홍' 등을 소개하고 있다. 농진청은 6월부터 9월까지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맛 좋은 복숭아 품종을 개발 보급해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34%로 나타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 창업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참여업체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일 '2018 지역 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사업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벤처캐피탈/엔젤 투자분야 5개사, 크라우드펀딩분야

3개사 등 총 8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본교육과 함께 투자포트폴리오 제작, 모의투자IR 및 상담, 크라우드펀딩 런칭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여기에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북 투자벤처로드쇼 출전 연계 등 투자자와의 매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탄소, 농생명, 문화ICT)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8월 13일부터 8일간 접수 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robenala@naver.com)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문의는 특화산업실 063-220-8903으로 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1.5배로”

### 국가인권위, 형사처벌 대상 제외 등 의견 대법원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소방이나 환자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복무의 1.5배의 달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 않지만 같은 법 5조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88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인권위는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통보사건을 인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들의 석방과 구제조치를 요구한 시에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인권위도 2005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왔고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구제활동·환자수송·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대체복무는 구제활동·환자수송·소방업무 등 현역 복무 기간 1.5배 기간을 합숙 형태로”

### 대체복무 정책 대안 마련 연구용역 진행 중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거부 사건은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72건의

## 靑, '은산분리 완화' 공약 배치 지적에 전면 반박

### “공약집·국정과제에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내용' 있어 정부차원 법안 제출 따로 없을 것... 국회 정무위 소관”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자 전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후보 시절 했던 공약과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를 하두로 꺼내 들었다.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 성장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

야 한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대통령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견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공약집 112쪽에 적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내용을 토대로 즉각 반박했다. 해당 공약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는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 과제와 1월 2일 신년 기자회견담화를 거론, "(당시에도) 다양한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안 제출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심이 꽤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로 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